

韓國產業의 現在와 產業政策의 方向

— 合理化 投資促進과 供給能力 擴大 —

房 錫 炫

<目 次>	
I. 韓國의 產業位置	7. 첨단 產業과 施設財 供給
II. 70年代의 產業政策의 問題點	8. 投資動向과 外債
III. 80年代의 產業環境	9. 不動產과 企業의 社會的責任
IV. 今後의 產業關聯 解決事項	10. 政府의 產業政策形成과 施行
1. 戰略과 產業政策	V. 80年代後半의 產業政策
2. 輸入自由化	1. 問題의 綜合
3. 低賃金の 問題	2. 合理化投資와 供給
4. 技術政策	3. 合理化投資와 供給政策의 效果
5. 大企業과 中小企業과의 關係	4. 政府의 產業政策轉換의 方向
6. 通貨와 金融政策	

I. 韓國의 產業位置

韓國의 產業은 60年代 以後 工業化를 指向한 以來 섬유를 비롯한 輕工業으로부터 半導體 등의 첨단 產業에 이르기까지 多樣한 產業分野의 發展을 이룩했다. 農水産鑛業을 비롯한 一次産業에서 輕工業, 重化工의 二次産業으로 急速한 轉換을 가져왔으며, 輕工業 등의 勞動集約産業에서 重化工의 資本集約産業으로 產業構造의 變化를 가져왔다. 特히 70年代의 石油化學, 機械, 鐵鋼産業 등에 대한 大單位 投資는 重工業國家로서 完全 定着하려는 意志를 反映한 結果라 할 것이다.

四次에 걸친 五個年 經濟開發計劃 과정에서 나타난 뚜렷한 現象은 60年代의 産業化 基本構造를 갖춘 후 高度成長과 對外指向 經濟를 표방하였으며, 이러한 目標을 더불어 2次에 걸친 油價暴落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였다. 國內에서 製造業의 發展定着개념은 國民生活에 필요한 物資의 供給에서 輸出指向을 뚜렷이 하였으며 이동안 內需의 긴축이 強調되었다. 한편 物價의 昂등으로 自然히 投資者는 投資利益에 關해 높은 기대를 하였으며 투기 심리가 全國民에 심어져 부동산 투자 私債 등의 社會적 문제가 야기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70年代 後半에 들어와 一部 政策立案者들이 安定의 重要性을 強調하기 시작하였

* 서울大學校 行政大院 助敎授

고, 第五共和國이 들어서면서 세계적 不況에 힘입어 國際原資材값의 安定, 賃金上昇의 억제와 더불어 경제안정이 定着되고 있다.

그러나 80年代의 經濟安定政策은 世界的 經濟環境의 變化와 더불어 國內産業部門에 많은 과급효과를 주고 있다. 주요한 것으로는 海外輸出의 둔화와 建設業을 비롯한 勞動集約産業의 한계를 들수 있다. 또한 인근 日本의 高度의 産業構造에 따른 자극으로 半導體等 첨단 산업등에 關心이 고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현황을 보면 勞動集約産業의 한계, 資本集約産業의 需要不足에 따른 不況, 知識産業에 對한 政策의 集中的 關心의 고조등을 들수 있고 현재의 이러한 상황하의 産業政策과 흐름으로 볼 때 80年代 後半의 우리나라의 産業은 과연 올바른 方向으로 전개될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바꿔 말해 80年代 後半의 産業政策의 方向이기도 하다.

II. 70年代의 産業政策의 問題點

일반적으로 開發途上國은 自國市場의 협소, 資本不足, 技術人力不足등의 한계로 勞動中心의 對外經濟體制를 指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된다. 그리하여 勞動集約産業에서 얻은 附加價値를 점차 重化學工業 쪽으로 投入하여 二次産業內에서도 輕工業에서 重工業으로 構造變化를 가져오는 것이 産業發展의 一般的 特性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술한 3가지 제약점을 지닌 채 對外指向의 産業政策을 추진하면서 大單位投資中心의 重化學工業으로 構造變化를 가져왔고, 80年代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市場, 資本技術충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80年代 후반의 전철을 밟을 위험의 소지가 있다. 事實上 國內市場의 취약성을 감안해 볼때 海外市場中心의 對外經濟爲主의 産業政策의 지속과 70年代 前半의 완만한 輸出市場의 成長狀況은 國內資本 不足現象을 가져왔고 따라서 外債의 과다한 반입으로 重化學工業, 電氣産業등에 과다하게 投入되어 낮은 資本生産性を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大單位 投資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技術人力의 부족을 각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外債를 들여 設立한 大單位 工場이 技術經營人力의 경험을 얻는 場所로 利用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요컨대 70年代 産業政策의 特徵을 지적해 보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對外指向의 經濟體制下에서 우리의 經營, 技術의 限界가 있는 重化學工業分野에 소프트웨어 蓄積努力 없이 過度한 資本集約의 施設投資가 이뤄 졌으며,

둘째, 政府의 過剩保護와 計劃經濟下에서 國內市場機能의 무시, 獨寡占에 의한 市場과 價格保護등의 산업정책의 결과, 企業合理化努力의 不在현상을 가져 왔다.

셋째, 國內市場이 狹小함으로써 對外經濟를 지향하다보니 施設資本財의 國內供給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外債負擔의 가중과 同時에 金屬, 機械 裝備등 過剩設備를 誘發하였다.

예로써 1978年 政策資金貸出의 56%가 이 분야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정책입안자들이 設備(소프트웨어 不在)와 製品에 關聯된 技術導入의 併行으로 輸出이 可能하다는 생각에서 政策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반면에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의 결과 우리輸出의 主種인 輕工業의 合理化, 設備投資는 거의 輕視되어 왔다.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勞賃下에서도 臺灣等 競爭國에 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로써 1978年度 이 分野에 대한 政策資金貸出은 전체대비 7.2%에 불과하였다(現在 섬유부분이 全體 輸出額의 1/4을 점유함).

다섯째, 全般的으로 企業合理化를 위한 合理化投資, 소프트웨어投資, 研究開發, 生産技術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政策의 뒷받침 없이 短期的 안목으로 對處함으로써 國內需要조차도 長期的인 國內供給의 전망을 흐리게 하였다.

여섯째, 未來의 產業構造變化에 對處하는 소프트웨어 準備段階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新製品市場에서 後發國의 位置를 벗어나지 못하고, 市場參與時에도 높은 附加價値를 期待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일곱째, 政府의 新規産業分野에 대한 政策設定時에 있어서도 規模의 經濟性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國內市場規模以上の 施設投入으로 몇몇의 企業을 위해 國內市場과 價格을 과잉보호해 줌으로써, 企業들의 安易한 經營, 技術習得 態度를 조장한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企業主들은 國內 特殊환경에서의 經營成功에 安住하는 資勢를 취함으로써 國際競爭力에 있어서 많은 脆弱點을 노출하였다. 따라서 企業마다 엄청난 管理人力과 非專門的인 技術人力을 과잉 確保함으로써 組織의 刷新과 生産性向上에 많은 制約要因으로 등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볼때 70年代의 產業政策과 經營體制는 官僚化된 計劃經濟와 官僚經營으로 立案과 施行이 되어 왔다. 이는 自然히 눈에 보이는 短期的 結果追求의 行政과 經營의 지속이며 따라서 產業의 方向提示와 技術人力 確保에 失敗하였다.

III. 80 年代의 產業環境

80年代 前半의 產業의 環境은 70年代末 第二次 오일쇼크 이후 不況의 常存現象과 第五共和國의 70年代 產業問題 해결을 위한 政策急變으로 企業의 現實安住를 不可能하게 하였다. 다시말해 企業의 體質變化가 社會的으로 요청되며 成長과 安定下에서의 企業의 位置를 再定立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이 기간동안 第二의 產業革命이라 불리는 技術狀況의 急變이 韓國産業에 일어 닥치면서, 이에 準備가 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企業들에게 未來의 經營方向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울여 졌다.

그러나 앞으로 첨단산업의 발전이 한국경제의 死活問題임을 인식하면서 80年代 後半 우리 産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狀況을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情報産業, 半導體와 應用産業, 이에 關聯된 三次産業(知識産業)의 位置가 점차 重要해지며,

둘째, 先進國의 施設自動化 推移는 勞動集約産業으로 부터 資本集約産業에 이르기까지 先進國의 生産力을 보다 強化시키게 되어 이른바 産業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理論의 재검토가 수반되고 따라서 後發國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셋째, 施設과 資本에 우선하여 經營技術의 노우하우(know-how)가 企業에서 더욱 重要한 要素로 대두되며,

넷째, 開途國의 立場에서 勞動과 技術이 同時에 必要한 分野를 찾아서 産業政策이 강조되며,

다섯째, 防衛産業育成의 強調로 이들 關聯 限界生産費遞減企業과 産業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금융배분이 계속되며,

여섯째, 金融自律化가 비리 문제와 關聯하여 한정된 범위에서 이룩되며,

일곱째, 人力供給이 新規와 기존인력面에서 産業構造의 變化에 신속히 대응해 이뤄질 전망은 그리 높지 못하고,

여덟째, 半導體, 遺傳子, 에너지, 素材등의 첨단기술이 全産業의 製品, 生産工程에 영향을 미치나 人力不足으로 고도의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아홉째, 技術政策이 研究所 中心의 技術開發과 이의 企業製品開發에의 응용을 強調하는 나머지 經營 및 生産技術등 合理化投資에 대한 政策마련이 간과되어 企業의 合理的運營에 의한 生産性增大 및 改善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전망이며,

열째, 對外經濟指向을 강조하는 국가주도 經濟下의 關聯화된 産業政策과 經營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상과 같이 80年代 後半의 産業환경을 고려해 볼 때 부단한 政府와 企業의 努力없이는 先進國과 後發國과의 同時競爭이라는 韓國産業의 딜레마를 풀어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IV. 今後的 産業關聯 解決事項

1. 戰略과 産業政策

전술한 문제점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産業政策은 設備容量등의 하드웨어(hardware)에서 소프트웨어(software) 입장에서 수립, 施行되고 評價되어야 한다. 이는 섹터(sector)별 産業分析에 있어서 産業全般的의 연계와 機能을 고려하여 現位置를 評價하고, 未來의 産業環境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戰略(strategic)的 觀點에서 政策이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說明한다면 획일적인 比較優位産業, 不況産業으로 명칭을 부치며 政策化하기 보다는 個別産業의 現在의 不足된 能力과 問題點을 未來의 市場과 연결시켜 평가, 보완시

켜 나가는 정책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예로써 二次大戰 以後 鐵鋼産業은 供給과 잉현상이 뚜렷하였다. 그러나 日本은 近代化된 合理的 設備과 原價節減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鐵鋼輸出의 世界 第一의 국가가 되었다. 어떠한 比較優位 産業이든 市場기회가 주어저 있더라도 우리의 經營과 技術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 별 意味가 없다.

産業政策에서 또한가지 重要한 점은 政策目標이다. 經濟의 發展은 國民의 니드(needs)를 充足시키는데 그 意義가 있다. 이는 國內에서 國民이 원하는 製品은 供給하는데 産業政策의 最優先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國內 消費抑制과 對外指向의 經濟는 資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一面 合理的으로 생각되나 이는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인식되어야 한다. 요컨대 資源이 없기 때문에 輸出을 하여 外貨를 벌여 海外에서 資源을 사온다는 논리의 이면에는 人力과 技術의 限界를 간과하고 있다. 技術과 資本集約 産業은 國內市場의 擴大를 통해 技術과 經營能力이 向上되며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輸出을 할 수 있다는 事實을 무시하고 있다. 特히 國民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싼값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國內市場에 적합한 商品을 개발함으로써 國際市場에서도 독특한 位置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2. 輸入 自由化

輸入自由化와 國產化의 개념은 상호배타적으로 産業政策에 수렴되고 있다. 그러나 輸入自由化가 狹小한 國內市場에서 競爭力을 강화시킴으로써 企業合理化를 유도하자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70年代의 絶對的인 國產化政策의 優位와 80年代의 輸入自由化政策의 絶對的 優位는 양자가 너무 極限上限을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70年代를 회고해 볼 때 소프트웨어의 객관적 評價 없이 급속한 設備投資유도에 의한 國產化政策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80年代에 들어와서 역시 소프트웨어의 向上努力에 등한하고 무조건의 輸入自由化에 의존하는 것도 매우 큰 문제이다. 輸入自由化의 前提는 우리의 人力과 技術水準이 한정된 分野에 국내산업을 보호함으로써 低質의 國內製品을 供給하여 경쟁있는 분야의 축소된 자원배분과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논조이다. 또한 政府의 産業간섭보다는 市場을 中心으로라는 경쟁환경을 造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데 輸入自由化의 意義가 있다. 그러나 이는 여태까지 政府의 計劃과 資源의 強制配分 下에서의 産業發展을 하루아침에 市場中心으로 유도시킬 수 있다는 理論的 측면이 너무 강조된 政策이라 할 것이다. 물론 이의 급속한 변화를 피하고 企業의 合理化를 유도하기 위해 輸入自由化 品目の 豫示制에 重點을 둔다고 하지만, 産業技術과 經營技術의 개발·정착이라는 戰略的 측면에서 본다면 豫示制에서 정한 2~3년의 期間은 너무 짧은 時間이다. 特히 技術과 資本集約産業이 이 과정을 통해 國際競爭力을 短期間에 끌어 올린다는 것은 不可能에 가깝다고 본다. 그러면 70年代에 大單位 投資와 엄청난 外債의 부담을 안고 있는 技術資本集約 産業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反問하게 된다.

3. 低賃金の問題

低賃金問題도 産業政策과 關聯하여 再考될 部分이다. 經濟安定과 國際競爭力 提高를 위해 賃金の 安定은 필수적인 것이 事實이다. 또한 生産性과 賃金이 상호직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도 當然하다. 그러나 企業의 合理化投資와 生産技術의 定着으로 生産性向上이 이루어진다면, 生産性向上에 따른 賃金上昇은 國內의 經濟發展을 위해 불가피하다 하겠다.

生産性向上은 事實上 勞動生産性보다 資本生産性에 직결되어 있다. 70年代 後半의 重化工分野의 과잉투자과 合理的 운영체제의 미비에 따른 낮은 資本生産性이 韓國産業의 낮은 生産性의 主要原因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企業合理化에 따라 生産性向上이 이루어지고 그만큼의 賃金上昇이 이루어진다면 安定下에서 國內消費가 增加하고 따라서 國內市場增大가 따르며 이를 기반으로 다시 國際競爭力이 향상되고 輸出市場增大가 이뤄짐으로써 경제안정과 成長을 同時에 이룩할 수 있다. 요컨대 80年代에 低賃金問題는 企業合理化投資와 직결시켜 긍정적 立場에서 政策化되어야 할 것이다.

4. 技術政策

技術에 關聯된 현재의 産業政策의 수립은 계속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技術은 基礎技術, 應用技術, 製品化技術, 生産技術로 細分하여 볼 수 있다. 80年代에 들어와서 政府의 技術政策은 産業에서 技術의 重要性을 인식시키는데는 成功的이었다. 그러나 이는 研究所中心의 研究開發, 製品開發에 重點을 둔 나머지 實際上 應用技術의 強調에 그친 느낌이다. 製品化技術, 生産技術은 各各 市場과 生産을 떠나 成立되기는 어렵다. 研究所中心의 研究開發은 첨단 産業이외에는 應用技術에 그치며 製品開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生産化할 수 있는 技術에 한계가 있는 한 市場成果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요컨대 研究所中心의 기술개발에 병행하여 企業의 生産技術의 개선·개발에 정부·기업의 공동노력이 더욱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産業의 시급한 課題는 生産의 向上에 있다. 다시 말해 제품을 저렴하게 高品質로 生産하여 國際競爭力을 向上시켜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生産技術의 定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産業化 과정에서 技術導入은 先進國에 依存하였으며 이중에 生産技術에 關聯된 것은 거의 없다. 기껏해야 生産技術은 設備導入後 企業內에서 自體의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경험에 의해 定立하였으며, 先進國에서 長期間 보완해 온 경험에서 비추어 보면 우리의 水準은 미천한 상태이다. 인근 日本이 50~60年代에 GNP의 0.6%정도에 해당하는 研究開發費를 投入하고도 高度의 生産性向上을 기한 것은 産業技術의 定着에 있었다. 研究開發에 의해 製品化된다하더라도 生産技術이 소프트웨어와 設備에 定着되어야 만이 低原價와 高品質의 製品을 生産化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日本이 全品目에 걸쳐 世界市場을 석권하고 있는 비결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景氣가 好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80年代 中半 이후 施設投資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동시에 生産技術의 開發定着으로 기준

設備의 活用도를 增大시킴으로 資本生産性を急増시킬 수 있는 절호의 機會라고 본다. 이는 통화와 外債의 問題를 동시에 解決해 줌으로써 安定下에서 成長을 지속적으로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大企業과 中小企業과의 關係

大企業과 中小企業間的 關係는 産業組織 측면에서 再定立되어야 한다. 80年代 이후 우리나라의 産業組織에 대한 관심은 韓國과 대만의 産業組織 측면을 비교함으로써 中小企業의 役割을 재인식하게 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우리의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현재의 위치를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은 重化學工業全般에 걸쳐 大企業中心으로 막대한 投資와 經營體制를 유지해 왔으며, 둘째, 中小企業의 大部分이 非技術人中心으로 창설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上記 2가지 특징에서 볼 때 韓國의 産業基般은 이미 大企業中心으로 資本과 人力이 重點의 投入되었으며 大企業은 활발한 技術導入으로 製品技術, 生産設備를 갖추었다. 예컨대 82年度 鑛工業의 총생산액중 中小企業이 34.6%, 大企業이 65.4%를 차지하고 있다. 從業員數를 보면 中小企業이 53.5%를 차지하고 있으나 生産性面에서는 中小企業은 大企業의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韓國 中小企業의 附加價値는 82年度 36.2%이며 이는 대만의 56%, 일본의 57.1%에 비해 볼때 현저히 비능률적인 현황이다. 그러나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事業體數面에서는 대만의 97%, 일본의 99.5%에 비해 한국의 97.3%는 구조면에서 유사하나 종업원수에 있어서 대만의 74%, 일본의 71.4%에 대비하여 한국의 53.5%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韓國의 産業組織이 보세위주의 輸出로 中間財輸入에 依存함으로써 中小企業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劣位에 있고, 앞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이 國內産業의 金후 重要한 課題라 할 것이다. 현재의 中小企業에 關聯된 政策을 이러한 關點에서 모순이 발견된다. 企業의 가장 重要한 要素는 市場이며 보세위주의 産業體制가 계속 이어지는 한에 있어서는 中小企業의 市場은 근본적으로 제한이 따르기 마련이다. 國內市場의 근본적 制限을 해결하지 않고 政策의 金融의 強制的 配分, 大企業의 집중도에 대한 무조건의 비판등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본다.

開進國에 있어서 中小企業의 형태는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中小企業은 同業種이 大規模集團化하여 分業體制로서 確立되든가, 둘째로 大企業의 系列下에서 그 生産體制로 編入되든가, 셋째로 國際分業에 직접 참여하든가 하는 것이다. 現在의 政府政策은 둘째와 셋째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둘째의 형태인 系列化는 安定的인 市場의 存在를 전제로 해야하고, 셋째 형태는 대만의 중소기업처럼 外國의 大企業과 직접관련하여 또는 長期信用과 供給의 확보로서 장기적 공급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韓國 중소기업의 非技術人中心의 특성과 中間財生産에 적극적이지 못한 政府의 政策下에서 근로자의 低賃金에 의존하여 少量多種製品의 生産에 依存하는 현재의 실정에 비추어 高級技術이 必要한 分野로 發

展할 때에는 좀더 市場과 소프트웨어 中心의 政策배려가 필요하다. 事實上 國內市場이 形成된 運輸裝置製造業은 계열화율이 83년도에 76.6%, 電氣機器製造業은 49.7%, 産業機械製造業 분야는 29.4%를 나타내 중소기업의 國內市場形成의 重要度を 보여주고 있다.

中小企業에 대한 金融支援中心의 政策은 大企業과 平等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政策化되어야 하며, 무조건의 강제배분 형식으로 지원이 강화될 때, 부실기업에 대한 運轉資金의 무리한 供給, 기타 不勞所得의 창출을 위한 投入으로 전환되버릴 可能性이 높다. 또한 施設投資에의 集中支援 역시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능력의 한계하에서 資本化함으로써 더욱 큰 問題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장 重要한 經營·技術의 能力을 보완하는 政策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點에서 系列化, 外國人자문등의 政策的 配慮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前述한 바와 같이 國內市場의 造成이 이루어지는 전제하에서이다. 系列化程度로 보아 耐久性 消費財分野에 있어서는 내수시장이 계속 확대될 전망이나, 産業機械分野에 있어서는 아직 그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들 중소기업의 市場供給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機會를 확대하도록 系列化政策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6. 通貨와 金融政策

通貨와 金融政策은 70年代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投資過熱로 現政府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어 왔다. 이에서 市場, 企業의 特性을 反映치 못한 計劃經濟下에서의 強制的인 配分과 量的 調整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현실적 經營·기술능력의 뒷받침 없는 자본기술집약산업에 대한 大單位資源配分, 施設中心의 投資에 치중하게 되었으며, 專門能力向上을 위한 소프트웨어 部門의 投資무시등으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과 80年代의 부실기업등을 낳게 된 큰 원인이 되었다. 이들 不實企業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배분은 未來의 産業構造面으로 볼 때 妥當한지는 의문스럽다. 이러한 政府主導의 金融通貨政策의 한계성은 이미 경험한 바이나 現在에도 늦어지는 金融自律화와 통화정책이 中央集權化된 상태에서는 뚜렷한 改善可能性이 보여지고 있지 않다. 특히 70年代의 金融配分の 구조적 모순의 結果로 企業의 도산에서 야기되는 경제비리 문제의 澈결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銀行감독원 기능의 강화와 銀行의 資金凍結을 가져와 결과적으로는 銀行 여신의 門專性 強化와 責任과 權限下에서의 金融配分の 淸토 定着에 赤信號를 보여주고 있다. 金融配分の 原則은 生産性이 높거나 向上의 可能性이 높은 企業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國家全體産業의 生産性을 높이는데 있다. 이로써 市場이나 自體소프트웨어能力以上の 무리한 資金投入은 가능한 배제될 것이며 이에 合理的인 金融配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資金의 供給面에서 과거의 輸出中心이나 不況期에서 보는 것처럼 企業의 附加價値가 낮은 상태하에서는 企業의 自體資金調達의 가능성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公開市場에서 유희자금을 흡수하여 企業의 資本化가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株式市場의 成長이 向後의 重要關心事項이다. 그런데 株式市場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政策은, 계속되어야 하나 機關投資를 中心으로 하는 安定政策은 소액 投資者의 利潤을 흡수하는 장치로 밖에 볼 수 없어 재고를 요한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억제와 第二의 株式市場을 形成하여 높은 위험(risk)과 높은 收益性이 기대되는 中小企業과 첨단 企業등의 株式를 公開함으로써 大單位 유휴자금 투자자의 기회를 부여하여 줌으로써 金融機關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大企業의 公開를 액면가로 強制化함으로써 유휴자금을 資本化하고, 同時에 金融機關의 資金을 企業의 運轉資金의 貸出에서 消費者 金融의 擴大로 전환함으로써 金融의 生産性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市場中心의 金融配分과 유휴자금의 흡수를 同時에 기함으로써 產學의 發展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통화정책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높은 인플레이션하에서의 量的 기준과 GNP 成長에 5%를 추가한 量的 두가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量的 통화정책은 통화배분에 있어 市場機能에 의한 合理的配分을 前提로 하여 巨視的立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金融配分에서 非合理的 配分要素를 고려하면 合理的 配分分野에 對한 規模가 相對的으로 축소됨으로써 全體의인 產業發展에 제약을 가져온다. 또한 生産性向上에 대한 금융배분의 고려없이 一律的 量的 供給으로 단기적 安定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통화정책은 產業政策과 分離되어 추진됨으로써 產業의 構造와 組織의 議化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총량중심의 거시적 배분에 의해서만 決定되고 있다. 특히 生産性向上에 따른 供給과 配分의 機能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통화정책은 金融自律化와 產業政策下에서의 通貨개념으로 묶어 조속한 시일내에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金利는 金融機關의 저축과 關聯하여 上向方向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市場金利의 造成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長期低金利로 消費者 金融을 擴大하여 住宅等 耐久性消費財의 國內市場과 供給의 擴大를 기하는 것이 보다 重要하다.

7. 첨단 產業과 施設財供給

첨단산업은 半導體와 컴퓨터를 中心으로 國內政策立案者들과 企業에 많은 關心을 일으켰으며 80年代 前半에 이미 이의 重要성과 未來의 포텐셜에 대해서 全產業에 깊이 인식되어 왔다. 특히 大企業을 中心으로 하는 半導體 64K RAM의 開發은 國民全體에 技術立國으로써의 희망을 불러 일으키기에 족했다. 個人用 컴퓨터의 보급과 이에대한 教育의 強調는 未來의 關聯人力確保에도 긍정적인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意味에서 64k RAM이 50%以上の 수율로 生産化한다고 하더라도 半導體 關聯產業 입장에서는 素材產業에 해당한다는 事實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半導體產業이 全產業의 生産設備, 工程, 設計와 製品에 應用될 때 비로소 첨단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데 이에 必要한 應用人力이 현재 全無하다는 事實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個人用컴퓨터 단계에 지나지 않는 컴퓨터로서는 소프트웨어의 不在로 實際的活用に 한계가 있으며 이는 한 단계 위인 마이크로 컴퓨터 단계로 갈 때는 더욱 심각한 問題로 대

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全産業의生産과정에서 電子化 應用은 先進한 바와 같이 企業의 生産技術에 대한 等한으로 施設의 自動化, 시스템화, 情報體系化 등에 한계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應用人力의 확보가 첨단산업발전의 關鍵이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경우 이를 製品化하는 企業들의 대부분이 自動化産業設備, 로봇, 裝置産業의 시스템화등에 대한 設備供給能力이 거의 不在인 상태이고 이와 관련하여 클린룸, CAD-CAM, 設備設計의 電算利用등의 신규 인력도 거의 확보되어 있지못해 研究所나 大學에서 適合人力의 배출역할이 거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있다. 더우기 大學生의 數에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는 추세이나 文教政策의 人力構造變化에 對한 對應不在와 교수부족으로 質·量면에서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合理化投資의 大部分이 産業機械, 産業電子, 情報産業등의 역할에 크게 依存하기 때문에 이러한 關點에서 資本生産性的 提高를 위한 合理化投資는 上記 첨단산업의 國內定着의 수준여하에 달려있다. 逆으로 合理化投資를 促進시키고 이의 國內市場을 保護하면서 첨단산업의 人力供給體系를 形成한다면 첨단 産業의 國內定着은 實質的으로 가능하다.

8. 投資動向과 外債

80年代의 後半期の 世界經濟는 先進國의 生産性 增加와 더불어 景氣好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先進國의 輸出市場의 신장이 기대되며 市場장벽에도 불구하고 國內景氣도 好轉되리라는 展望이다. 이것은 84年度의 設備投資가 製造業部門에서 作年對比 34.7%의 신장이 예상됨으로써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重化學工業은 電子産業을 中心으로 前年에 비해 42.9%에 달함으로써 급진장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投資動機面에서 設備擴張이 45.4%에 달함으로써 生産技術 등 소프트웨어(software)에 대한 合理化投資를 等한시한 채 하드웨어 中心의 資本投入이 이뤄지고 있다. 先進한 바와 같이 生産技術으로써 施設容量을 增大함으로써 資本生産性を 높히려는 企業의經營과 技術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써 必要以上の 資金需要를 유발하게 될 것이며 이는 景氣好況期에 製品價格 상승에 일조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의 잠재력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先進한 첨단산업중심의 國內供給體制的 미비로 大部分을 海外에 依存함으로써 外債의 심각성은 80年代 後半에 가일층 될 것이다. 外國 機資材 및 기술도입과 이로인한 外債增加는 景氣好況以後에 나타나는 不況期에 있어서는 産業의 硬直된 構造와 더불어 韓國産業이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될 수 있는 것이다.

設備投資의 動機面에서 또 하나의 우려되는 點은 에너지와 素材生産性이다. 80年代 前半의 世界的 景氣침체시에 에너지를 비롯한 素材의 國際價格의 下落과 安定은 國內 經濟安定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世界的 景氣好轉은 이러한 에너지, 素材의 國際價格 上昇을 유발하여 이는 國內商品의 原價와 價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 경기침체에 設備과 製品面에서 에너지와 素材의 生産性提高의 努力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다면 景氣好況期에 가서는 經濟基調의 安定을 흔들리게 할 것이다. 이는 投資動機面에서 에너지를 節約 投資가 全體의 1.7%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우려는 事實化하는 실정이다. 한편 에너지 消費의 增大내지 낭비는 外債 부담을 증대시키는 한 원인이다.

設備供給의 國內供給誘導政策의 強化는 國內景氣活性化와 外債부담의 축소, 첨단, 産業機械部門의 소프트웨어와 人力확보 등의 동시과급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잇점이 있으나 한편 輸入自由化政策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내생산품의 低品質, 高價格化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 面의 측면에서 政策化할 것이 아니라 70年代 既投資設備의 活用도 고려하여 利得과 코스트를 同時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設備는 大部分 日本에서 구입 가능성이 높으므로 日本과의 무역역조현상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9. 不動產과 企業의 社會的 責任

高度의 成長에 따르는 國土利用의 增大는 土地價格의 實質的投機的 上昇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金融의 機會가 주어진 個人이나 組織이 開發情報를 가지고 높은 不勞所得을 올렸다. 이는 大企業을 中心으로 주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大企業은 工場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주변투자를 통해 이를 담보로 하여 金融의 혜택機會를 높임으로써 企業經營의 不實에도 不拘하고 企業확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러한 環境下에서 企業의 正常的이고 積極적인 企業合理化를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海外市場에서 熾란한 競爭을 거쳐야 하는 企業이 政府의 保護와 상기한 非正常的이며 높은 收益이 기대되는 投資機會를 가진다면 相對的으로 國際競爭力의 弱화내지 정체를 가져올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 이러한 投資를 先導하였던 一部 建設會社의 經營不實이 문제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企業에 대해 政府의 金融支援을 계속한다는 것은 國內資本을 非能率的인 分野에 投入함으로써 能率的産業의 成長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企業의 國際競爭力向上과 유동성 자금의 企業化를 위해서 不動產所得에 대한 稅金부과를 강화하던지, 根本的으로 기회를 봉쇄하던지 政策強化가 불가피하다.

企業의 利潤極大化 目標는 資本主義 社會가 아니더라도 企業의 能率과 産業社會의 發展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政府의 金融授惠의 機會, 부동산등 不勞所得의 增大의 機會, 國內市場에서의 市場과 價格의 보호등은 正常的 企業運營과 利潤極大化와 관련되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企業은 國內企業의 成長과정에서 現企業主와 二世經營陣의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現在의 經營규모와 과거의 成長要因을 고려할 때 이제는 正常的 經營活動을 통한 高度의 能率提高, 生産性向上등 長期的 안목으로써 韓國社會의 發展에 기여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만약 企業主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치 못할 시에는 企業主의 企業內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켜 專門經營人의 活動폭을 增大시키는 方向으로 조세, 금융등의 政策調整이 이뤄져야 한다.

재벌의 매출액 極大化로 高度의 成長을 達成하려는 目標에 異議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目標達成 과정에서 문어발식의 기업팽창에는 國際競爭力과 關聯하여 問題가 있다. 企業主 또는 企業經營人으로써의 어떤 分野에 對한 專門性의 重要性을 무시하여 他分野로 進出時에 당연히 코스트를 지불하게 되고 이는 社會코스트로써 남게 된다. 또한 기존분야에 대한 경영합리화에 등한함으로써 모처럼 競爭力이 있는 분야에서의 利得을 再投資로써 강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利益分을 새로운 분야에 투입하는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많이 보아왔다. 예로써 섬유분야의 施設노후정도는 심각한데도 이 분야의 利得이 重化工業에 무리하게 투입되어 全體的인 經營不實로 귀착된 企業을 많이 보게 된다. 특히 經營者能力의 제고에 의하지 않고, 低賃金에 의존, 國內市場의 보호등을 요구하며, 專門人力開發에 등한한 企業主를 우리 產業全體에서 무수히 발견하게 되는 것도 韓國產業의 將來에 어두운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10. 政府의 產業政策形成과 施行

韓國의 經濟成長은 제한된 資源을 經濟發展計劃下에서 配分함으로써 정부주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市場機能을 前提로 하지않는 資源의 強制配分方式은 70年代까지 產業化의 基盤을 造成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80年代에 이르러서 종래의 方式에서 탈피하여 市場機能을 전제로 하는 政策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國內의 限定된 資源을 고려할 때 政策的 配分方式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나, 市場機能의 活性化와 配分の 合理的 政策配慮가 더욱 요청되고 있다. 配分の 合理化를 기하기 위해서는 現在의 產業, 市場과 未來의 技術, 市場構造變化등의 情報을 必要로 한다. 이러한 情報은 각 산업부문별 미시적조직에서 提供되며 政府의 計劃經濟의 能力으로는 한계가 있다. 政府로써 이에 대한 철저한 노력없이는 情報수집에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수립된 政策의 지속성(cortimity)과 일관연계성(consistency)面에서의 效果는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第二의 產業革命期의 未來의 技術發展 推移등 韓國產業의 좌표를 결정하는 데 必要한 情報취합과 政策에의 反映을 合理的으로 운영하지 못할 시에는 強制配分の 위험성은 더욱 높다.

현재 產業政策面에서 政府의 組織은 상호 긴밀히 연결되지 못해 산만하게 되어 있다. 전반적 產業政策形成은 經濟企劃院에서, 施行은 工商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부문별 산업정책의 경우 技術과 人力開發은 科學技術處와 文教部등 양부처에 分離되어 있고 情報產業과 첨단산업은 체신부를 中心으로 정책이 형성되고 있어 相互간의 연계부족과 調整의 역할부족현상이 극심하게 노출되고 있다. 특히 政府는 비리제거 政策과 關聯하여 企業情報의 창구역활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 이러한 情報가 政策形成에 실제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의 문점을 제기하게 된다.

產業政策은 經濟目標下에서 產業構造, 組織, 企業合理化, 技術, 人力, 金融과 通貨등 諸

般政策을 상호 연계성 있게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關點에서 市場機能의 擴大와 具體的 技術, 經營情報를 취합, 평가하여 產業政策下에서 연계와 調整이 가능하도록 政府의 組織과 役割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주어질 필요가 있다.

V. 80年代 後半의 產業政策

1. 問題의 綜合

80年代 後半의 產業政策의 方向은 前章에서 提示된 產業全般과 環境의 問題點을 해결하며 安定과 同時에 高度의 成長을 이루는 것이다.

前章에서 提示된 問題點은 產業自體의 問題點과 環境의 問題點으로 區分할 수 있으며, 環境問題 解決의 大部分이 우리 產業의 問題解決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解決은 問題의 根源을 찾아 그問題를 集中的으로 解決하여야만 政策施行의 效果를 極大化할 수 있다. 事實上前章의 問題點들은 相互 연계되어 根源의 問題해결시에 他問題는 저절로 해결되는 현상도 發見된다.

政策施行의 效果는 市場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前章의 마지막 節에서 밝힌 產業政策에 있어 政府의 役割과 관련하여 強調되었다.

前章의 問題點中에서 企業側面에서 노출되는 根本的 問題點은 企業의 資本生産性에 있다. 70年代 後半期의 重化學工業分野의 集中的 投資와 不況期에 이의 보완 노력의 부족으로 80年代 後半에도 여전히 가장 重大한 課題로 남아 있다. 投資動機에서 본 바와 같이, 기투자 部分의 合理的 운영을 등한시하고, 같은 生産量을 產出하기 위한 施設投入資金과 이의 감가 상각충당으로 인해 경쟁력 向上에 제약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同時에 이러한 과다의 設備供給을 外國에 依存함으로써 外債의 累增이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더우기 앞으로 예상되는 好況期에는 이의 보완이 매우 어려움으로써 80年代 後半의 競爭力은 相對적으로 제한된 成長을 시현할 것이고 外債問題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의 부족분을 相對的인 低賃金으로 보완하려는 政策이 지속되는 한 國內市場의 狹小와 低賃金에 따르는 방만한 人力活用으로 人力의 專門化수준이 낮을 것이고 우리경제의 先進國에로의 발돋움에 장애요인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에너지와 素材의 節減은 好況期에 극도로 필요한 政策이다. 世界景氣의 好轉은 이의 價格 昂등을 유발하여 이의 節減 없이는 競爭力 外債問題의 심각성을 계속 내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의 해결은 好況期 以前에 해결해야 되는 課題이며 이러한 노력의 결여시 나타날 결과는 이미 지적한 바이다.

世界市場構造는 첨단산업의 發展과 더불어 명백히 변화할 것이다. 특히 先進國의 半導體의 應用은 全産業의 生産과 정과 製品에 擴大普及되며 이에따라 世界市場의 構造

變化도 불가피하다. 國內의 產業構造도 점차적으로 이러한 方向으로 變해가야 한다는 것은 後發國과 先進國의 사이에서 또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全產業分野에 걸쳐 반도체의 應用과 關聯人力 확보 여부가 企業의 成敗를 좌우한다. 따라서 市場機能과 關聯하여 國內 市場의 形成과 國內供給體系的 정비가 産業정책의 요체라 할 것이다.

이러한 諸問題를 해결하는 唯一한 方法은 企業의 合理化 投資促進과 그의 國內供給能力의 擴大에 있다. 80年代 後半에 이의 解決없이는 先進國으로의 指向은 근본적 모순을 낳게 될 것이다.

2. 合理化投資와 供給

合理化投資는 포괄적으로 製品生産性を 높이고 品質을 向上시키며 따라서 國際競爭力을 높이는 諸投資를 총칭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生産에 직접 關聯된 生産技術中心의 自動化, 高機能化, 에너지節減등의 施設補完投資와 關聯技術投資를 일컫는다. 여기에는 위의 것 이외에 生産성 향상을 저해하는 原因分析과 意思決定의 質을 向上시키기 위한 生産에 關聯된 情報體制의 확립도 포함된다.

광의의 의미로는 製品開發과 素材開發과정을 거쳐 제품의 高附加價値에로의 轉換과 資源의 節約을 포함한다.

韓國에서의 合理化投資의 意味는 우선적으로 狹義의 의미인 合理化投資에 초점이 集中되어야 한다. 우리의 對外經濟構造는 製造業中心으로 되어 있으며 기존제품의 合理的 原價節減과 品質向上이 當面과제로 남아 있다. 事實上 이러한 협의의 合理化 投資과정을 거치면서 첨단산업의 應用人力이 全產業에 과급되고, 이들 専門인력에 의해 製品開發의 노력이 市場供給과 연결되어 企業의 主導下에 이루어질 수 있다 본다. 이때의 製品開發은 生産技術의 定着에 따라 國內外 市場에서 競爭力이 있을 정도로 生産化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合理化 投資促進에 따르는 供給側面은 大部分이 소프트웨어 中心의 製品開發과 이를 生産化하는 能力에 의존한다. 또한 情報體制의 形成에 必要한 컴퓨터, 컴퓨터소프트웨어, 事務自動機器등의 첨단산업의 供給도 포함된다. 이것은 주로 産業機械와 産業電子部門을 中心으로 大企業과 中小企業이 상호연계된 供給體系의 形成에 집중된다. 따라서 供給設備보다 人力의 소프트웨어 축적이 근본 課題이며 이를 大企業中心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근본 政策課題인 것이다.

3. 合理化投資와 供給政策의 效果

合理化投資의 促進으로써 얻을 수 있는 最大의 效果는 設備의 生産性提高에 있다. 기존 設備를 적은 資金으로 合理化投資를 함으로써 生産容量의 增大를 기할 수 있다. 이로써 安定的 金融需要가 발생하기 때문에 好況期에도 製品價格의 安定과 同時에 通貨量의 安定으로 인플레이션을 防止할 수 있는 直接的 效果가 있다.

또한 高度의 生産性 增大로 好況期에 人力需要의 팽창을 內部的 기존인력으로 해결함으

로써 人件費의 安定을 기할 수 있다. 이로써 추가 附加價値를 근로자에게 配分함으로써 低賃金問題도 同時に 해결될 수 있다.

供給의 國內擴大는 外債問題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의 應用인력의 확보, 産業機械와 産業電子産業 中心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合理化投資에 依한 低賃金問題의 해결로 國內의 耐久性, 消費財市場의 擴大를 가져와 본격적인 重工業中心 産業體制의 定着과 景氣活性化가 可能하다. 이로써 韓國의 産業構造는 첨단산업을 포함한 高度의 構造에로 實質的 轉換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본다.

需要와 供給體系의 整備는 大企業과 中小企業과의 關係를 市場의 인센티브中心으로 形成시키게 되어 참다운 中小企業의 位置를 同時に 재정립할 수 있다.

技術政策의 方向도 狹意의 合理化投資와 關聯하여 企業주도의 生産技術의 개발과 定着에 두고 이 바탕위에서 製品開發과 應用技術이 實際적으로 企業自體努力으로 研究되고 製品化가 可能해질 것이다.

이는 根本적으로 人力과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하는 政策이며 高度의 生産性增大와 더불어 相對적으로 적은 資金需要와 함께 安定과 成長을 同時に 追求하는 唯一한 政策方向으로 판단된다.

4. 政府의 産業政策轉換의 方向

景氣好轉과 더불어 國內産業을 再整備함으로써 80年代 後半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도록 현시점에서 산업정책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再檢討가 요망된다.

새로운 跳躍을 위해서는 安定基調下에서 ①高度의 成長, ②外債와 低賃金問題의 解決, ③高度의 産業構造로의 再編등 우리産業의 당면 目標를 同時に 解決할 수 있는 최선의 方法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필자는 이것을 産業의 生産性 向上에 依한 高附加價値의 創出과 이에 따른 國際競爭力의 提高로 輸出市場을 擴大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70年代 後半까지의 國內産業은 勞動集約的 産業部門에 의한 國內外 供給擴大로 資本 蓄積을 도모하였으나, 技術·資本集約的 産業部門의 過剩重複投資와 2차오일쇼크 이후 先進國 經濟의 不況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勞動·資本, 에너지 生産性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의 代表的 産業의 예를 들면

첫째, 國際競爭力이 있는 섬유등 勞動集約産業에 대한 合理化 投資에 等한함으로써 低賃金下에서도 대만, 홍콩등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태이며,

둘째, 國內의 經營과 소프트웨어 能力이 미치지 못하는 機械産業등에 과도한 大單位 設備投資가 계속 증대되는 한편 이에 상응할만한 운영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본생산성이 열위에 놓여 있으며,

셋째, 裝置産業의 設備補完의 부족으로 에너지 生産성이 열위에 있다.

이러한 70年代의 낮은 生産性的 根本問題는 작금에 와서도 企業측면에서 해결이 안되고 있으며 이러한 낮은 生産性下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景氣好轉과 함께 安定基調를 해칠 우려가 있다.

景氣好轉에 따라 나타날 가장 우려되는 점은 기존 設備의 運用技術과 設備補完能力이 定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한 增設, 무모한 施設 대체 현상이 계속될 可能性이 높으며 이로써 國內通貨의 增發, 外債增大의 위험이 常存한다는 것이다. 또한 景氣好轉에 따라 熟練技能人力과 엔지니어의 不足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따라서 生産性 向上 以上の 賃金上昇을 유발할 可能性도 배제할 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問題를 同時에 解決하는 企業의 努力과 政府의 集中된 政策方向은 다음의 3가지로 要約된다.

첫째, 高速自動化設備, 에너지節減設備, 生産技術, 生産情報體系등의 合理化投資를 全企業이 經營정책의 第1義로 설정함으로써 기존設備의 적은 投資로 容量增大, 勞動, 資本, 에너지 生産性的 向上을 기하는 것이며,

둘째, 合理化投資로 生産성이 向上되고 이로써 발생하는 附加價値의 增大를 低賃金과 연결하여 종래의 企業과 근로자 사이의 所得의 不均衡을 시정하고,

셋째, 合理化投資에 필요한 設備, 컴퓨터生産技術, 소프트웨어등의 개발공급체계가 國內市場을 中心으로 定立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上記 세가지 政策關心事項의 解決은 低賃金の 해결, 高度의 資本·勞動, 에너지生産性的 시현, 근로자의 高賃金화와, 國內供給擴大에 따르는 外債問題해결, 安定下에서의 景氣活性化, 研究所中心의 應用術衛과 企業의 生産術衛의 연계강화, 컴퓨터와 그의 應用에 따르는 첨단 산업분야의 國內市場 中心의 定着등을 同時에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80년대 後半期의 산업정책의 方向은 첨단산업을 中心으로 도모함으로써 景氣活性化와 合理的 産業構造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勞動集約産業을 資本技術集約化함으로써 品質向上과 더불어 國際競爭力의 提高가 可能하고 따라서 自動化된 産業機械 産業電子등의 海外進出이 보다 加速化되리라 판단된다.

이의 成功的인 途行을 위해 産業政策의 운용에 있어서 다음의 事項들이 政策에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通貨, 金融, 術衛, 人力政策등이 장기적 산업정책의 맥락하에서 구체적으로 政策化되어야 한다.

合理化 投資促進과 供給體系는 일차적으로 企業 자체의 노력에 의해서 달성되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産業政策의 최우선 순위를 여기에 부여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조정,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政府는 企業의 生産性 向上을 위해 이와 관련된 投資를 合理化投資라고 공식명명하

고 이를 정책에 具體化함으로써 70年代의 問題인 資本生産性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셋째, 金融自律化가 實際적으로 더욱 빠르게 定着되어야 한다.

金融여신의 기준에서 合理化 投資에 최우선권을 부여하고 모든 政策性 資金을 이 부분에 綜合管理함으로써 기업경영의 방향을 합리화 투자의 확대에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70年代 術術·資本集約産業의 製品을 大單位設備만으로 輸出할 수 있다는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분야는 國內의 市場 造成과 國內供給의 經驗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自動車 전자산업등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으며 産業機械, 産業電子분야에 대한 이러한 과정은 불가결하다 본다. 따라서 輸入自由化 政策도 이 분야에 대한 上記 현상을 고려하여 國內기업의 경험에 소요된 기간을 豫示制에 反映시켜야 한다.

다섯째, 研究所와 첨단기술 中心의 製品開發의 技術政策은 지속하여야 하나, 企業의 生産技術 개발에 대한 重要性은 더욱 強調되어야 한다.

生産技術의 발전은 設備, 設計, 生産管理등 生産工程과정에서 合理的 原價節減, 品質向上을 實際로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기존시설에 적은 投資로서 生産容量을 增大시킬 수 있어 이 분야의 定着은 生産中心으로 되어 있는 企業과 輸出戰略에서 가장 중요하다. 또한 생산기술의 개발 경험으로 研究開發된 製品의 개선, 신제품의 개발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종래 韓國企業의 技術導入은 大部分이 製品設計와 生産設備化 技術의 導入이 주종을 이루었다. 設備의 運用技術과 補完技術은 大部分 自體의 미숙련 전문가와 部分的인 外國人 자문에 의해 정착되었으나 지속적인 補完努力이 요청된다 어떤 기업은 같은 設備와 치공구류, 공정의 보완등으로 두 倍以上의 設備增大效果도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여섯째, 合理化 投資에 對한 需要와 供給面에서 必要한 人力의 確保이다.

이는 設備의 電子化, 컴퓨터의 利用擴大, 事務自動化 등 半導體 應用등의 專門人力뿐만 아니라 이의 供給産業에 소요되는 必要人力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合理化 投資를 要하는 産業人力의 再訓練과 供給産業의 新規人力의 確保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大學의 교수 확보, 연구설비 확충과 연구자금증대, 大學院入學시험의 보완, 研究員制度의 도입등을 통해 實際적인 學·産의 共同協調體制가 必要하다. 또한 生産技術은 生産現場에서 開發되고 定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有經驗外國人 자문의 대폭 확대, 이 분야의 기술도입 등이 促進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CAD·CAM, 情報體系등 소프트웨어 개발과 供給을 컴퓨터와 연결시켜 供給시킬 수 있는 人力을 市場과 金融의 인센티브제 개선을 통해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다.

일곱째, 中小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産業機械部門에 있어서 大企業과의 系列化를 促進해야 한다. 供給市場을 前提로 系列化함으로써 實際的系列化가 可能할 것이고 供給에 대해 輸入自由化政策을 재조정함으로써 組立爲主의 大企業責任下에 原價, 品質의 경쟁력을 유

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政府가 제품의 標準化, 規格化를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듈화까지 定着시킴으로써 中小企業의 多種小量生産體制에서 專門生産體制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여덟째, 資金市場의 正常化와 擴大이다. 시설, 容量增大를 위한 施設投資費보다 合理化投資에 필요한 資金所要額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合理化投資로 인해 예상되는 景氣活性化는 生産性 向上과 同時에 어느정도 많은 자금수요를 유발할 것이다. 그러나 합리화투자에 對한 供給을 기존의 통화량 건축개념에서 어느정도 완화해도 經濟安定을 해치지 않는으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大企業들은 社會的 責任을 인식하여 株式市場의 公開에 적극참여하여야 할것이고 높은 위험성과 높은 收益性이 기대되는 中小企業집단 기업들도 第二의 公開市場을 통해 유휴자금의 흡수에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企業이 必要로 하는 運轉資金은 加급적 消費者金融으로 轉換하여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市場경제 中心으로 자금의 合理的 配分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上記合理化投資政策은 모든 産業관련 政策間 또는 관련 政策部署間에 공동의 協調와 調整이 필요하며 이의 수립과 施行은 企業의 經營, 技術등의 소프트웨어 측면의 능력 평가에서 出發해야 한다.

이러한 評價下에서 長期的안목으로 産業政策을 입안하고 産業政策의 目標達成을 위한 金融, 技術, 人力, 産業組織등의 政策이 수행되어야 實效를 얻을 수 있다. 이의 成功의 수행 여부가 새로운 도약을 결정지을 것이다.

이로써 開途國에 공통적인 産業發展의 根本問題인 自國市場의 狹小, 技術·經營人力의 不足 資本不足 현상은 同時에 점진적 해결이 可能하며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産業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끝으로 현재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구동성으로 주장되는 기술개발 첨단산업의 육성발전, 비교 우위산업론 등의 견해들도 궁극적으로는 合理化投資의 관점에서 새로운 조명을 하고 개념의 재정립을 시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